

김현미 장관 “안전사고 없는 안심 일터, 공공부터 솔선수범”

- 22일 건설현장 안전대책 점검·논의…공공현장부터 솔선수범 강조
- 건설 근로자 안전생명 보호 위한 법적 제도 갖춰갈 것…임금체불 근절 당부

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5개 지방청장 및 도로공사·토지주택공사·한국철도공사·국가철도공단 4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「건설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」를 열고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.

□ 김현미 장관은 “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‘건설안전 혁신방안’을 내놓고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,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세*에 있다”면서,

* '17년 506명 → '18년 485명 → '19년 428명(상반기 229명) → '20년(상반기 254명)

- “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 “더 늦기 전에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할 때”라면서, “공공기관 소관 건설현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사고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”이라고 주문하였다.
- 또한, 김 장관은 “정부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‘건설안전특별법’ 등 법적 제도를 갖춰 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-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“코로나-19에 이어 장마까지 길어져 건설 근로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”면서,
- “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, 안전에 이어 생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근절에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0. 9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